

Doing Good Index2020 웨비나 영한 번역본

Doing Good Index 2020 결과보고가 아름다운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이 함께 주최하여 진행되었습니다. Center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이하 CAPS)가 주관하는 Doing Good Index(이하 DGI)는 18개 국가에서 공익활동을 하기위해 양적 질적 성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DGI 이외에도 CAPS에서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는 응용연구 (예 :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연구), 맞춤형연구(기부자가 의뢰하여 진행하는 연구)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 SK 그룹에서 의뢰받은 연구가 있습니다.

<Doing Good Index 2020 결과 강연 내용>

전 세계가 어려운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경제적 타격, 지리경제학적으로도 전 세계가 현재 봉착한 난관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소셜섹터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셜섹터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자선재단, 기업사회공헌단체 등 모든 사회적 이슈에 동원된 플레이어 말합니다. 현재 수행하는 새로운 일들 뿐만 아니라 기존 소셜섹터가 하고 있던 일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감안하고 어떻게 소셜섹터가 기존 일과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해보겠습니다. 공익활동평가지수 DGI는 규제와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전체 지역이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지고 있지만 여러 문제를 공유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선업계가 미국 전체 GDP에 2%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CAPS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 아시아 전체 5870억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액수는 아시아로 들어오는 해외 원조 금액보다 12배 많고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루는 비용의 1/3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움직임, 자금이동이 제약이 있는데 이 아시아 GDP 2%가 실현될 경우 각 국가 스스로 자금 한해서 충분히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DGI 조사 결과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좋은 일을 증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정리하고 형성하는 것 2. 신뢰 결여를 완화하기. 이 신뢰 결여 부분에 있어서 CAPS에서 18개 아시아 국가를 보았을 때 한국에서 특히 신뢰 결여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기업, 정부 소셜섹터, 제3섹터가 신뢰도 결

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여러 섹터가 신뢰문제가 근본적으로 역사적 문제가 쌓여 있겠지만, 섹터 간 협력증진이 필요합니다. 3. 민간사회투자 극대화를 해야 합니다.

DGI 2020에 18개 국가가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2,189개의 사회공익단체, 14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습니다. 범아시아적 연구와 함께 각 국가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다 더 편히 보실 수 있게 DGI 만 따로 보실 수 있는 사이트 제공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한국어 번역은 아름다운재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DGI 4가지 항목을 보고 있는데 — 규제, 세금 및 재정혜택, 정부조달, 생태계 — 규제 세금 재정, 정부조달정책은 정부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국가를 순위별로 나누지 않고 각 카테고리 나누고 알파벳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이어 Doing Better에 있습니다. 이 그룹에 올해 새로운 국가인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개선해야할 부분은 규제를 개선하고,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향상하며(세금정책과 연결), 신뢰회복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규제는 단체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운영, 설립할 수 있는가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설립목적은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데 규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단체를 설립하는 과정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3개월 정도 걸리는데 한국은 이 수치의 2배에 달합니다. 한국은 단체 설립과 운영에 있어 관할하는 부처가 43개인데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표면적 수치를 넘어서 규제와 관련된 한국의 움직임, 변화는 본 보고서 내 각 국가 프로필에 적혀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과도한 참여(관할)은 결국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에서 최근 들어 여러 단체들이 의무적으로 단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에 올리는 요구조건이 많아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는 업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현행 업무에 수행에 많은 부담이 되어 다른 측면으로도 어려움을 있을 것입니다. 규제는 필요합니다.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규제는 결국 콜레스테롤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은 것처럼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시아에서 더 중요합니다. 기부자를 포함한 개인과 단체가 세금정책을 통해 정부가 얼마나 이 섹터를 좋게 생각하는지 활동을 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측면에서 소득에서 100% 공제하면 정부가 더 기부를 장려하는구나 라고 기업에서 시그널로 이해할 것입니다. 긍정적

인 측면에서 세금혜택이 기업을 위해 100%이긴 하나 소득의 양 중 10%만 보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는 편입니다. 개인기부측면에서 세금정책이 더 암울합니다. 아시아에서 3번째로 낮고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도 100%인데 한국은 좀 더 발전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인 기부를 더 많이 권장하지 않는다까지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습니다. 부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유산기부에 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는 4개국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CAPS에서 알아본 바는 서울시청의 경우 유산을 상속할 개인이 없다면 그 유산을 사회공익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결여를 보여주는 통계 관련해서는 연구결과 18개국 중 13개나(한국포함) 범국가적인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캔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대략 4개 단체 중 3개가 스캔들로 인해 모금활동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국은 '개인기부가 낮다'에 있어 유일한 국가가 아니지만 주된 원인을 소셜섹터에 대한 신뢰가 낮다고 답변했다는 점입니다. 정작 단체는 신뢰를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도 사회에서 신뢰를 못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 평균이 44%이고 한국은 13%입니다 이런 신뢰결여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셜섹터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할 가장 간단한 것은 정부가 선행에 대해 인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4개국 중 1개국(정부차원에서 기부를 홍보하고 장려하는 나라) 정부가 선행이나 소셜 섹터를 인정하고 이 섹터를 위해 정부 자체가 소셜섹터를 돈을 주는 행위는 이는 정부조달사업입니다.

정부조달사업을 소셜섹터에 줌으로서 1. 소셜섹터 역량을 개선 2. 소셜섹터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18개국 중 3개국이 독립적으로 관할하는 부처가 있는데 한국은 그러하며 과정이 투명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달과정이 투명하고 쉬었다고 답변한 단체는 정부조달과정을 겪은 단체이고 이러한 과정을 겪은 단체는 16%에 불과합니다(아시아는 26%). 소셜섹터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 스스로 단체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분 국가의 비영리 단체는 연차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제출합니다. 캡스의 경험으로 대부분의 국가, 단체가 연차보고서를 사이트에 묵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 비영리업계 자체가 나서서 여러 규제, 신뢰를 해결하는 것인데 파키스탄, 필리핀은 비영리 업계가 자기인증제도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3. 기업과 협력을 많이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설명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회공익단체에 얼마나 기부를 하느냐는 아시아 평균이 비슷한 편입니다. 아시아 평균 15% 평균 한국은 16%입니다. 2. 돈을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은 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사회에 소속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영리단체는 대부분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필요인력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출신 자원봉사자와 일을 하는 것은 아시아 평균 51% 한국은 37%입니다. 기업출신 이사회 소속되는 수치도 아시아 평균보다 낮습니다.

환경과 규제, 세금측면모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획 및 도전 슬라이드는 빠르게 지나가고 좀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재부분과 관련하여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비영리업계 종사자가 임금을 낮게 받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70 한국은 80입니다. 여기 네트워크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좀더 어려운 부분이 기부금을 받는 기업들과 기부자들이 단체 역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스

역량강화 부분에 대해 결국 행정 조직운영(회계) 인데, 매해 소셜섹터 단체들은 본인들의 재정을 특정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압박과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또 신뢰문제와 연결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량강화에 계속 돈을 쓰지 않는다면 단체들은 계속 신뢰가 결여되는 것입니다.

메베시

이와 함께 새로 생겨나는 소셜섹터 트렌드가 사회적기업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에서 긍정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비즈니스 워크 보고서). 긍정적인 트렌드인데 사회적기업은 비슷한 출처를 통해 자금을 모으게 되는데요, 이는 불필요한 경쟁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크라우드펀딩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 20%가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는 50%로 차지합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적용되기도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이 반증하는 것이 아무래도 규제가 기부자 신뢰결여 연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루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세제혜택, 정부조달에 더 협력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재정지원, 기술전달,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소셜섹터는 정부와 기업과 관계형성은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면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 수고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기반 +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내용과 관련된 것, 포함되지 않은 점들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질문 1

두 가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세금관련 데이터에서 세금 인센티브 관련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매우 놀라웠는데요. 한국은 세액공제인데 다른 나라도 세액공제인지, 소득공제 부분이 아닐지요? 미국도 100프로 tax credit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결여에서 정부 기업 소셜섹터가 해야하는 것들을 말씀주셨는데 언론관련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조사한 것이 있을지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루스

미디어 관련한 설문조사의 질문은 범사회적 스캔들이 있었나, 이를 언론이 다루었냐고 질문했는데, 전반적 태도와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결국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인데요,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언론사들은 부정적 내용 사건사고를 보도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메베시

DGI에서 직접 사회단체에 물어본 것이 본인들이 국내 언론사와 접촉, 협력하는 가인데 대부분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하였고, SNS 네트워크에서도 이와 같은 질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금관련해서 한국의 제외한 다른 17개국은 소득공제(tax deduction)입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개 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인데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국가시스템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 혜택 액수를 넘어서 아시아에서 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무리 소득공제가 100프로 10프로라도 본인 소득 한계수치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진행 :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100만원 기부했을 때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추가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질문2

비영리단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보공개와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요구가 비영리단체의 고유의 활동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가 기부금 사용에 있어서 규제하기 보다는 단체의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는 자기증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자기증명, 자기규제를 하는 방법이나 원칙, 또는 기준이 있을까요?

루스

자기규제든 정부규제든 한가지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측면에서 일관된 규제가 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제거해야 합니다.

메베시

자기규제 관련해서 이것이 더 쉽고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파키스탄, 필리핀도 정부이상의 문서를 요구합니다. 파키스탄, 필리핀 경우 두가지 자기 규제 관할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를 통해 인증받은 단체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관리감독합니다. 필리핀은 PCNC 파키스탄은 PCP가 있습니다. 파키스탄 PCP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는데요, 단체에 기부혜택을 주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시도를 했는데 협회가 인증은 아니더라도 이 단체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1단계 수준으로 good housekeeping을 합니다. 인도 가이드스타는 정부의 대리역할까지 하고 싶었으나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3

한국정부는 기부자의 알권리라는 명분하에 국세청 홈택스에 단체 공시정보를 올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실제는 단체에 대한 규제 장치입니다. 공시내용도 회계를 모르면 잘 모를법한 내용들입니다), 과연 일반 국민이 이 정보를 얼마나 보고, 이해 할까요? 이것이 세법상 규제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요? 미국은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지? 우리는 공시정보를 언론이나 다른 측면에서 네거티브 이슈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루스 : 한국도 가이드스타가 있지만 아직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질문4

단체들이 올해 고충 많았다. 국세청에 공시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공시정보를 얼마나 볼지, 회계내용을 잘 모르는데, 미국도 공시제도가 있을텐데 미국은 일반국민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루스

정보공개가 규제랑 비슷한데, 더 많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스토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순히 정보공개를 넘어서 단체가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소셜섹터의 문화가... 법적으로 무죄추정이 있는데 비영리는 유죄추정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유죄를 추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죄라는 것을 얼마나 잘 이야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CAPS에서 몇 년 전 한국 단체 사례가 있는데, 그 중 이상했던 것 중 하나가 본인들의 행정비용이 당해년도에 2%만 차지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의 직원, 임금 사무실 렌트비를 감안하면 이는 말이 안됩니다.

질문5

귀한 연구자료 공유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큰 문제는 비영리단체 신뢰를 판단하는데 기금사용 내역이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18개국에서 13개 나라가 부정적 스캔들을 겪은 것 중. 낮은 신뢰를 극복한 사례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루스

결국 기금사용 이슈를 떠나서 대부분 사기성과 관련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업과

관련된 스캔들도 안 좋은 기업단체가 있기 마련인데, 기업의 경우 범사회적으로 업계를 바라보지 않지만 비영리는 하나의 스캔들이 섹터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사용 관련해서 기금을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보다 스캔들은 이 기금을 왜 무슨 의도로 사용하는가였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스캔들 보면 왜 무슨 의도로 기금을 주었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에서 국립의료보건의재단에서 재단 대표와 임원들의 부적절한 임금사용, 즉 사적 목적으로 기금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예로 중국 적십자사 스캔들로 인해 소셜 섹터 전반에 들어오는 기금 90프로가 떨어졌고 이 스캔들로 중국도 여러 가지 수정하고 하락수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질문6

한국의 신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인지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직면했구요, 올해 우리나라 경우 큰 스캔들로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규제를 더 줄여달라고 하는 것이 방향성에서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되며 규제를 정리는 해야하고 뭔가 혜택을 더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루스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자는 무엇인가 숨길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혜택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한국이 부족합니다. 질적 측면에서 조달정책이 높은 편인데 양적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세 번째 신뢰결여 부족문제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만나면서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기업, 정부 사회섹터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메베시

정부와의 소통과 대화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캡스 DGI 질문 중 정부와 정책과 관련된 소통을 이어 나가는가에 대해 한국은 13프로 낮은 것입니다. 누가 먼저 소통을 나서야 하는가가 아닌 규제 변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확립되지 않은 이 상황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소셜섹터도 정부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책무성 투명성 강화입니다.